

# 끝내... 6월 국회 세월호 특별법 무산

### 새누리 "수사권 줄 수 없다" 완강히 반대 새정치 "전례없는 참사 전례없는 법 시급" 여야, 임시국회 재소집 협상 재개 방침

여야의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 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4차 회담'을 통해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시간도 없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7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늦게 또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내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음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해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줌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세월호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

서 "수사권을 부여하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정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전례 없던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대형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전하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외에도 한울원전 3호기에서도 유사 사례를 발견했다. 문제가 된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된 것들이다.

다만 원안위가 이들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안전 이력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해당 기기를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철거하고 나서 잔류 응력(Residual Stress)이 남으면 재료 성질의 변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WHT)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열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적절한지를 미리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후열처리다.

모의후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접후열처리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배관·밸브가 설치된 원전



여야 "헌법 가치 지킵시다"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광 한빛원전 3~6호기 배관·밸브 열처리 시험 기록 누락

### 원안위, 안전성엔 영향 없어 한빛원전 6호기 재가동 승인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6기의 일부 배관·밸브가 열처리 시험을 거쳤다는 기록이 없는 채로 설치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에 대한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3~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열처리 모의시험인 모의후열처리(S-PWHT)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관이나 밸브와 같은 철강기기를 용접하고 나서 잔류 응력(Residual Stress)이 남으면 재료 성질의 변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WHT)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열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적절한지를 미리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후열처리다.

모의후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접후열처리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배관·밸브가 설치된 원전

이 안전하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외에도 한울원전 3호기에서도 유사 사례를 발견했다. 문제가 된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된 것들이다.

다만 원안위가 이들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안전 이력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해당 기기를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철거하고 나서 잔류 응력(Residual Stress)이 남으면 재료 성질의 변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WHT)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열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적절한지를 미리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후열처리다.

모의후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접후열처리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배관·밸브가 설치된 원전

## 광주시 이달 인사부터 다면평가 도입

### 희망전보제는 선호 부서로 몰려 효과 의문

광주시가 이번달 말로 예정된 민선 6기 첫 정기인사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본인희망 전보인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 말로 예정된 승진인사부터 승진 예정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거친 뒤 서열화해 승진 의결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다면평가자 구성은 조직 내 인기위주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직급·직렬별 3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직급은 5~7급 위주로 구성된다. 특히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10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되 최고·최저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직원들의 고른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능력보다는 인기 위주의 평가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꺼려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성향이 높은 다면평가의 특성상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배제되고 인기투표로 흐를 경우 부하직원을 독려해 '열심히 일하는 상사'보다는 직원 방치형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나 듣는 상사'가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시는 또 전보인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실·국장 추천제에 본인희망제를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실·국장은 부서 과장과 사전 협의해 3배수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전보희망자는 직위희망 이유, 업무추진계획서 등을 작성해 3지망까지 제출하면 결과를 종합해 전보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특성상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일부 부서가 전통적인 선호부서로 통한다는 점에서, 전보희망자가 선호부서로만 몰릴 가능성이 커 '본인희망제'의 의미 자체가 퇴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사업무만 복잡해질뿐 인사 결과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꺼리는 비선호 부서의 인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바뀐 인사는 승진과 전보 인사 시 실·국장과 개인 의사가 모두 존중되는 상황으로 소통과 화합은 물론 조직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쌀 개방 오늘 공식선언... "관세율 9월 결정"

### 野, 여·야·정+농민단체 구성 논의 제안

정부는 18일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사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

석해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쌀 관세화 여부 등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당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창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기존 의무수입량(MMA)이 연간 41만t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 조충훈

민선 6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전반기 회장에 조충훈(사 진) 순천시장이 선출됐다.

전남 시장·군수 22명은 17일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민선6기 첫 협의회를 열어 전반기 회장을 선출하고 시·군 당면 현안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한 '전남의 공동상생과 번영을 위한 결의문'에서 '각 시·군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와 관광·교통·국제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을 밝혔다.



www.yh-bus.com

#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6회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SIEMENS  
EVC빌딩  
수협  
상무점

지멘스 상무점  
학림빌딩 501호  
농협(은천지점)  
아바들점